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구속 기소



사진=농협금융지주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각각 고소를 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회장을 고소한 가사도우미가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5일 구속돼 같은 달 31일 검찰에 송치됐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수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소라 기자

은행 인사적체 해소 조짐…인력 피라미드형 전환

국민·KEB하나·농협·기업銀, 책임자보다 행원 더 많아
베이비붐세대 끝자락 65년생 을 대부분 ‘임피’ 돌입
비대면채널 강화로 지점 수 감소… 퇴직 갈바람 계속

지난 몇 년 동안 은행의 고민은 항아리형 인력 구조를 탈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매년 겨울 끝자락에 직원들을 대거 내보내는 희망퇴직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은행의 인력 구조는 항아리형 구조에서 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KB국민· 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3분기 기준 행원은 총 3만 25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책임자급 직원은 2만4483명으로 행원급 직원이 8036명 더 많았다.

항아리형 인력 구조는 일반 직원 중 행원급보다 과장·차장 등 책임자급이 더 많은 비만형을 뜻한다.

통상 사원, 대리(계장), 과·차장, 부장 등으로 승진하면서 자리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다. 수년째 행원보다 책임자급이 많았지만, 그 비중이 역전된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현재 행원급이 6424명으로 책임자(과장·차장) 4854명보다 1570명이 더 많아 피라미드형 구조로 전환했다.

국민은행이 줄곧 신입 행원 채용을 늘리고 대대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인력구조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국민은행은 5년 전까지만 해도 행원보다 책임자급 직원이 많아 인사체제가 심각했다. 때문에 매년 1000명에 가까운 직원을 내보냈는데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KEB하나은행의 행원은 현재 6542명으로 책임자(4221명)보다 2321명 더 많다.

KEB하나은행 역시 일반 매년 희망퇴직에 준정년 특별퇴직까지 실시하며 퇴로를 확대한 결과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맞춰 신입 행원을 대거 늘려 항아리형 구조를 탈출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책임자보다 행원급 인원이 각각 2298명, 3061명 더 많아 안정적인 피라미드 구조를 완성했다.

우리은행은 책임자와 행원 수가 각각 3600여 명으로 동일한 수준까지 맞췄다. 우리은행의 경우 대대적인 희망퇴직보다 매년 만 54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와 희망퇴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경정은행보다 유연한 인사정책을 시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IBK기업)은행의 3분기 기준 행원은 총 3만251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시장경제DB

도해 올해 피라미드형 구조를 이루진 못했지만, 내년부턴 베이비붐 세대가 대부분 은퇴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2020년부터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갖출 것이란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책임자급이 더 많아 인력 적체가 여전했다. 신한은행은 책임자가 4137명으로 2923명인 행원급보다 1214명 많다.

은행권이 인사적체를 해소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요구도 한몫한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늘리는 대신 신규 채용을 확대하도록 세대 간 빅딜을 요구하면서 오랫동안 누적된 인사적체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앞으로 희망퇴직 수 만큼 신입 채용을 늘리는 방법도 한계가 있다. 모바일뱅킹 확산으로 지점 수가 줄고

영업방식이 변하면서 신규 인력이 대거 모로 필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인력적체가 개선되고 있지만, 앞으로 디지털뱅킹 전환에 따른 지점 수 감소로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며 “결국 지점 수를 줄인 만큼 직원 수를 줄여야 하는 결과만 되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lleehappy@naver.com

Cannes Lions 수상작 지면 전시



The Scarlet Letter by Nathaniel Hawthorne

CLASSICS MADE MODERN

Same stories, now in digital formats.
Access all our collections on the Chicago Public Library app.



Industry Craft Bronze Lion Campaign

Title: SCARLET LETTER 주홍글씨
Client: CHICAGO PUBLIC LIBRARY 시카고 공공 도서관
Agency: FCB CHICAGO Product: LIBRARY 도서관
Copy: The Scarlet Letter by Nathaniel Hawthorne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

Classics made Modern 고전이 현대를 만나다
Same stories, now in digital formats. Access all our collections on the Chicago Public Library app.
같은 이야기, 이제는 디지털 형식으로 보세요. 시카고 공공 도서관 App에서 우리의 모든 컬렉션을 만날 수 있습니다.

“DLF 구제’ 은행 망할만큼 ‘징벌적 배상제’를”

시민단체-노동계-학계, DLF 피해 구제 토론회
강경훈 교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사전 효과 가능”
금융정의연대 “금감원이 오히려 쟁점 만드는 상황”

파생결합상품(DLS·DLF)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적 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정의연대는 12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과 함께 초고위험파생상품의 은행판매 문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은 원금손실 확정해주는 기관이 아니니까 법원에 가야한다’고 말한다”며 “이는 100% 배상을 받으려면 법원으로 가야 한다는 쟁점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지 않는 이상 DLF 사태는 또 발생할 것”이라며 “은행이 망할 정도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받은 개인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증권 외에 금융 피해 발생시 피해자들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당국과 면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은행들이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사후적인 제제가 엄중함에 따라 사전적인 구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수많은 상품들을 감독당국이 일일이 승인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보다, 사후제재를 무겁게 해서 내부 통제가 잘 돌아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더 이상 등한시 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은 “지금까지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이유는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였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사업자를 보호해야 할 실익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오른쪽부터) 금융위원회 손영재 자본시장과장, 사무금융노조 김호열 증권업종본부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이대순 공동대표 겸 변호사,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성균관대 로스쿨 고동원 교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 사무금융서비스노조 정책연구소 정승일 소장.

이어 김 본부장은 “은행 이름만 한국 이름이지 외국인 자본율이 70%를 넘나든다”며 “금융당국의 철학이 사업자 보호 혹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보다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언론보도를 통해 금감원이 DLF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경우 국회 정부위에서 (결과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억지로 만든 ‘필승코리아 펀드’ 정부 여당 독려로 1천억 돌파

NH농협 ‘日出출규제 대응’ 펀드
3개월 만에 달성… 수익률 6.98%

문재인 대통령이 투자해 유명해진 ‘필승코리아 펀드’의 모금 액수가 3개월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NH농협금융은 17일 자회사인 NH-아문디자산운용이 지난 8월 출시한 필승코리아 펀드 판매수탁고가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기업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출시 초기 상품의 인기도나 판매액은 저조했다. 펀드 판매 첫날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과 이대훈 NH농

협은행장, 배영훈 NH아문디자산운용 대표와까지 가입해줬지만 초기 자금은 300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8월 말 문재인 대통령이 펀드에 가입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를 기점으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주요 부처 장관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제히 투자에 나섰다. ‘대통령 펀드’가 된 것이다.

대통령이 가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금이 모이고, 수익률도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15일 기준 필승코리아 펀드의 설정 후 수익률은 6.98%(모펀드 기준)로 집계됐다. 필승코리아 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61개 국내기업에 투자 중이다. 이 가운데 부품·소재·장비기업은 43개다. 금액 기준으



사진=농협금융지주

로는 56%를 관련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NH농협금융은 운용보수(0.5%)를 낮춰 실질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용보수의 50%를 기금으로 적립해 기초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기부한다는 계획이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